

코로나19와 신홍안보의 복합지정학 : 팬데믹의 창발과 세계정치의 변환*

김상배**

논문 요약

2020년 상반기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는 세계정치의 변환(transformation)을 야기한 획기적인 사건 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정치’에 대한 기존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 국제정치학’과 ‘전통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단편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창발(emergence)로 인해서 변환을 겪고 있는 세계정치의 복합적인 양상을 염두에 둘 때, 아직 한창 벌어지고 있는 현상임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정치를 보는 이론적 분석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코로나19는 ‘신홍안보’(emerging security)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홍안보로 보는 코로나19 사태는 ‘양질전화(量質轉化)’와 ‘이슈연계’의 과정을 거쳐서 ‘지정학의 임계점’을 넘어서 창발하는 복잡계의 위험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보면 단순한 개인건강의 문제이겠지만, 이것이 양적으로 늘어나서 일정한 임계점을 넘게 되면 국민건강과 지역 및 국가적 차원의 보건문제가 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 경제와 사회, 외교 등의 이슈와 연계되면서 국가안보를 논할 정도의 문제로 그 위험이 상승하게 된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는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타고서 창발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적 생존을 거론할 정도의 위중한 성격을 드러냈다. 이 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세계정치가 지니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적 동학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코로나19, 팬데믹, 신홍안보, 복합지정학, 세계정치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409).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https://doi.org/10.18854/kpsr.2020.54.4.003>

I. 머리말

2020년 상반기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는 국제정치학에서 환경·보건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환경·보건 문제가 중요하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환경·보건 문제가 그야말로 국제정치학의 내재적 변수임을 각인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100년 후나 다할 것 같던 지구온난화 문제와는 달리 단기간 내에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pandemic)으로 ‘창발’(創發, emergence)한 코로나19 감염병은 바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를 치명적인 안보위협으로 체감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점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정치의 ‘변환’(變換, transformation)을 야기한 획기적인 사건 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국제정치학의 안보연구 관점에서 볼 때,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 질서에서 탈냉전(Post-Cold War) 질서로의 변환을 겪었고,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근대 질서에서 탈근대(Post-modern) 질서로의 변환이 발생했다면,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인간 중심 질서’에서 ‘탈인간(Post-human) 질서’로 변환하는 시대극의 서막을 열지도 모른다.

국제정치경제 연구의 관점에서 보아도, 코로나19 사태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데 1997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관련된 국지적인 파장을 낳았고,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주로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위기여서 국제협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었다면,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위기는 팬데믹이라는 외생 변수에 의해서 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국제협력의 전망도 요원해 보여서 그 충격이 더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사태가 미칠 영향은 다양할 것이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거리두기’의 여파로 심각한 경기침체가 시작되었고, 식량수급의 불안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었다. 금융 시스템과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도 거론되며, 더 나아가 20세기 전반과 같은 대불황의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이 이주·난민 문제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결합하여 사회안보(societal security)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고, 코로나 봉쇄로 인해 급부상한 비대면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보 문제도 쟁점이다.

코로나19는 세계질서 전반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페스트의 창궐은 동로마 제국의 쇠락을 앞당겼고, 스페인 군대가 전파한 천연두는 16세기 중남미 제국을 멸망시켰으며, 100여 년 전의 스페인 독감은 세계대전보다 더 큰 충격을 주며 팩스 브리태니커 질서의 종식에 방점을 찍었다. 팬데믹의 형태로 엄습했던 고대와 중세 및 근대의 감염병이 세계질서의 변동은 물론 문명사적 변환을 추동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코로나19도 미국이 주도했던 20세기 세계질서의 지평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명의 도래를 앞당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코로나19 사태의 발생 이전부터도 글로벌 보건문제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관심은 크게 늘어 왔다(신상범 2017).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정치’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연구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시각의 제시에만 머물고 있다(Walt et al. 2020). 이 글의 본문에서 인용한 외교안보 전문 시사저널들에 실린 에세이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코로나19라는 변수는 그냥 ‘블랙박스’에 담아놓고 막연히 세계정치의 변화를 논하거나, 코로나19의 영향을 논하더라도 그것이 독립변수인가 아닌가를 묻는 ‘단순 국제정치학의 시각’을 취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 논의가 탐구하는 세계정치 변화의 내용도 코로나19가 미중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냐고 묻는 ‘전통 국제정치학의 발상’에 머물고 있다(Nye Jr. 2020; Rudd 2020; Haass 2020).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차원에서 변환을 겪고 있는 세계정치의 복합적인 양상을 염두에 둘 때, 아직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상임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정치를 보는 이론적 시각을 시급히 정립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블랙박스’에서 꺼내서 세계정치의 변환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변수의 위상과 역할을 단순계의 시각을 바탕으로 한 ‘인과성’(causality)의 구도에서만 보는 ‘실증주의적 관성’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복잡계의 시각에서 본 코로나19라는 변수의 위상은, 그것이 독립변수나 아니냐의 여부가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축적되고 있던 여러 변수들이, 코로나19의 발생을 계기로 어떻게 재구성되면서, 활성화되거나, 또는 도태(selection)되었나를 밝히는 ‘창발’의 과정에서 찾아져야 한다. 이렇게 이해한 코로나19라는 변수의 성격은, 복잡계 환경을 배경으로 ‘여과효과(filtering effect)’를 발휘하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최근 국제정치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신홍안보(emerging security)에 대한 논의를 원용하여 코로나19라는 변수의 성격과 거기서 파생되는 세계정치의 변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한다. 신홍안보로 보는 코로나19 사태는 ‘양질전화(量質轉化)’와 ‘이슈연계’의 과정을 거쳐서 ‘지정학의 임계점’을 넘어서 창발하는 복잡계의 안보위협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보면 단순한 개인건강의 문제이겠지만, 이것이 양적으로 늘어나서 일정한 임계점을 넘게 되면 국민건강과 지역 및 국가적 차원의 보건문제가 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 경제와 사회, 외교 등의 이슈와 연계되면서 국가안보를 논할 정도의 문제로 그 위험이 상승하게 된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는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타고서 창발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안보를 거론할 정도의 위중한 성격을 드러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개되는 미중경쟁은 글로벌 패권과 국가안보를 걸고 벌이는 지정학적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고전지정학의 시각으로 다시 돌아가 코로나19 사태를 분석하지는 말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생물학적 바이러스가 영토공간을 넘어서 전염되는 ‘탈(脫)지정학적 이슈’인 동시에 지구화 시대의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라는 ‘비(非)지정학적 현상’이고, 바이러스의 공포를 주관적 위협인식으로 연결시키는 ‘비판지정학의 문제’이다. 이 글이 취하는 이론적 시각은 전통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기반을 둔 고전지정학을 넘어서 자유주의나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 그리고 탈국제(post-international)와 탈근대(post-modern)의 지평에서 제기된 복잡계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을 둔다. 이 글이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이라는 개념을 원용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

락이다(김상배·신범식 편 2017; 2019; 김상배 편 2018;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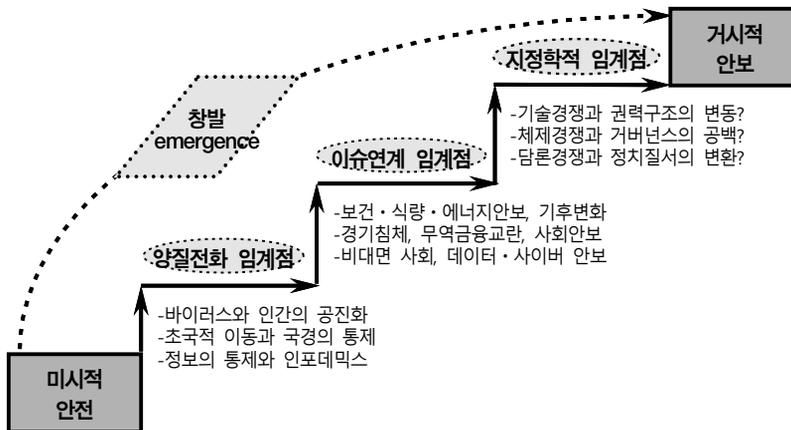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정치를 보는 이론적 분석틀로서 신홍안보와 복합지정학의 시각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코로나19의 창발과 팬데믹의 양질전화를 바이러스와 인간의 공진화, 초국적 이동과 국경의 통제, 커뮤니케이션과 인포데믹스 등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제4장은 코로나19와 신홍안보 위협의 이슈연계 메커니즘을 보건안보, 식량·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경기침체, 금융·무역 교란, 사회안보, 비대면 사회의 부상,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안보 등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제5장은 코로나19의 (복합)지정학을 기술경쟁, 체제경쟁, 담론경쟁을 벌이는 미중 패권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권력구조와 글로벌 거버넌스 및 글로벌 정치질서의 변환을 살펴보았다. 맺음말에서는 이 글의 주장을 종합·요약하고 한국이 모색할 신홍안보 거버넌스와 중견국 외교전략의 방향을 간략히 짚어보았다.

II. 신홍안보와 복합지정학의 분석틀

1. 신홍안보로서 코로나19 사태

신홍안보의 사례로서 코로나19는 양질전화의 과정과 이슈연계의 메커니즘을 거쳐서 창발하는 위협으로서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어서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된다(<그림-1> 참조). 미시적 차원에서 보면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감기에 걸리는 문제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 양이 늘어나서 일정한 질적 임계점을 넘게 되면 국민건강과 지역 및 국가적 차원의 보건안보 문제가 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 여타

| 그림 1 | 신홍안보로서 코로나19의 창발



출처: 김상배 2018. p.40에서 응용

신홍안보의 위협이슈들과 연계되면서 국가안보를 논할 정도의 문제로 그 위협이 증폭되기도 한다. 코로나19는 단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전세계적 대유행을 초래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양질전화-이슈연계-지정학의 창발 메커니즘은 단계적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서로 중첩되어 동시에 일어나는 성격의 현상이지만, 이 글에서는 논리적 분석틀의 마련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김상배 편 2016; 민병원 2017).

첫째, 양질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는 풍토병(endemic) 단계의 ‘우한 폐렴’이 팬데믹으로 창발한 사례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코로나19는 단순한 바이러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물리적 환경, 그리고 이와 공진화(co-evolution)하는 숙주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지구화로 인해서 확장된 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와 그 저변에서 작동하는 교통·정보·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와 인간, 그리고 물리적·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함께 구축하는 복합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본 코로나19의 행위자-네트워크는 안보위협을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로 작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안보 현상’과는 다른 구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창발한 신홍안보로서 보건안보의 위협, 특히 코로나19는 그 높은 전염력과 변종능력만으로도 기존의 보건시스템을 와해시킬 정도의 위기 상황을 낳았다. 보건안보의 위기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붕괴시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보건안보 문제로서 코로나19 사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과 연계되면서 그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통제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야기되고 무역·금융·산업이 교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케 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시작된 위협이 이슈연계의 메커니즘을 타고서 국가 전반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신홍안보의 속성이 코로나19에서 그대로 발견되었다.

끝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어서 국가 행위자들 간에 외교안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 사례가 최근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나타났다.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은 지난 수년간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19년 이후 첨단부문에서 벌어진 기술패권 경쟁만 보더라도, 미중경쟁은 이른바 ‘사이버 라운드’와 ‘화웨이 라운드’, 그리고 ‘데이터 라운드’로 진화해 왔으며, 그 경쟁의 예각이 ‘코로나 라운드’에서 맞붙고 있는 형국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미중 국력의 상대적 격차에 주목하던 기존의 관점이 미중 양국의 체제가 지닌 위기해결 역량의 차이로 이동했다는 것이며, 코로나19 사태의 해법을 놓고 양국의 글로벌 리더십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코로나19 사태의 복합지정학

이렇듯 신흥안보로서 코로나19는 보건안보의 경계를 넘어서 국가 간 분쟁과 동맹, 그리고 전쟁 등과 같은 전통 국제정치학의 이슈들, 즉 ‘지정학적 임계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주류 국제정치이론 진영이 주로 원용한 고전지정학적 연구의 관심사가 된다. 고전지정학은 물질적 자원권력의 분포와 이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라는 시각에서 주로 국가 행위자들이 벌이는 전통안보 분야의 경쟁에 주목해 왔다. 이는 국제정치의 역사에서 패권국과 도전국이 벌이는 지정학적 권력경쟁과 여기서 파생되는 ‘세력전이’의 과정에 주목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논의와 통한다(Mead 2014).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정치를 단순히 전통 고전지정학의 시각에서만 규정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사태는 지정학적 공간에 고착된 국가간 경쟁의 시각을 넘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국제적 해법을 모색하는 비(非)지정학적 협력의 문제도 제기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는 지구화의 산물이며, 단순한 보건안보의 문제를 넘어서 통상, 금융, 산업, 외교 등의 이슈로 연계되며 글로벌 차원의 인류건강과 보건주권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쟁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국가영토의 경계를 넘어서는 ‘상호의존’을 강조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색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시각과도 맥이 닿는다(Ikenberry 2014).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안보의 세계정치는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시각에서 이해된 비판지정학의 성격도 지닌다. 특히 보건안보의 위협이 ‘양질전화 임계점’의 문턱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국제안보 연구의 코펜하겐 학파에서 말하는 ‘안보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동한다. 사실 코로나19의 진원지나 유포과정, 그 경로, 확진자의 동선, 진단과 백신 등에 관련된 문제가 개인과 집단 및 국가안보 문제로 비화되는 과정에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위협’ 만큼이나 위협을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동한다. 최근 벌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이면에는 이러한 안보화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Hansen and Nissenbaum 2009).

한편, 코로나19의 보건안보 게임은 기존에 근대 국제정치가 벌어졌던, 지리적 공간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탈(脫)지리적 공간과 겹치면서 발생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인간이 설정해 놓은 지리적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탈지리적 존재이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유포된 사이버 공간도 기본적으로 지리적 공간을 초월하여 구성되고 작동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은 기본적으로 기술과 정보 및 데이터와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만들어내는 탈(脫)지정학의 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보건안보 게임은, 전통안보의 공간처럼 영토적 공간에만 고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유동적인 복합 네트워크 공간을 배경으로 작동한다(Castells 2000).

이러한 시각을 종합해서 보면, 코로나19의 세계정치는 고전지정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론적 시각을 원용해서 봐야 하는 복합지정학의 현상이다. 탈지정학적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의 부상 은 보건안보의 정보세계정치적 중요성을 크게 높여 놓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보건안보 위협을 경고하는

안보화의 세계정치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바이러스와 인간의 초국적 이동은 국제협력의 거버넌스와 국제규범의 형성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급하게 제기한다. 요컨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세계 주요국들의 코로나19의 거버넌스와 외교전략은 이러한 보건안보의 복합지정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Ⅲ. 코로나19의 창발과 팬데믹의 양질전화

1. 바이러스와 인간의 공진화

2019년 12월말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의 발생이 처음 보고된 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며,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공식 선포했다. 2월 11일에는 감염병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발표했으며, 3월 11일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공식 선언하였다. 코로나-19의 발생이 보고된 이후 100여 일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팬데믹 선포 직후인 2020년 3월 20일자 WHO 상황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모든 세계국가들을 포함하는 173개국에서 23만 4천 7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WHO 2020a).

팬데믹은 그리스어로 ‘모든’이라는 뜻의 ‘pan’과 ‘사람들’이라는 뜻의 ‘demos’의 합성어인데, 모든 사람이 감염되었다는 의미이다. WHO에 따르면 팬데믹은 아직 인간이 면역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 전세계로 확산된 경우를 말하는데, WHO의 여섯 단계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단계에 해당된다. 이러한 팬데믹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 인류 역사상의 전염병은 14세기 중세 유럽을 초토화 시킨 페스트, 1918년 수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 1968년 100만 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 등이 있다. 1948년 설립된 WHO가 여태까지 팬데믹을 선언한 경우는 세 차례였는데,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플루(H1N1), 그리고 2019년 코로나19이다.

코로나19는 일곱 번째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다. 이전에 발생한 여섯 종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네 종의 바이러스(HCoV-229E, HCoV-OC43, HCoV-NL63, HKU1)는 경증에서 중등도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나머지 두 종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킨 사스(SARS)와 메르스(MERS)이다. 이번 코로나19에서 확인된 일곱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및 메르스와 같이 박쥐에서 기원한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으로 유전자 분석결과 사스 유전체와 89.1%의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20). 여기서 ‘신종(新種)’이라는 말은 ‘새로운 종류’이기도 하지만 ‘신흥(新興, emergence)’이라는 말로도 해석된다. 여기서 신흥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전에는 인간에 해롭지 않았으나 감염원인 바이러스 변종이나 숙주인 인간 또는 바이러스와 인간의 관계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면서 새로이 인간에 감염되는 질병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가 ‘인수(人獸)공통감염병’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은 바

이러스 진화 과정에서 생긴 돌연변이가 종간(種間) 장벽을 넘어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사스는 박쥐와 사향 고양이로부터,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됐다. 코로나19도 우한 수산물 시장에서 거래된 박쥐와 천상갑을 거친 것으로 지목된다(조용우 2020). 최근 이러한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빈발하는 이유는, 병원체의 자연적 진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무분별한 산림파괴와 경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인간과 동물 간의 물리적 거리가 줄어들면서 밀접 접촉이 늘어나고, 그 결과 동물에게만 있던 병원체가 인간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은 그야말로 인간중심주의적 환경파괴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김창엽 2020).

코로나19는 변종을 통해서 진화하는 바이러스와 숙주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의 용어를 빌면, 코로나19는 비인간 행위자(non-human actor)와 인간 행위자(human actor)가 만드는 ‘행위자-네트워크’의 복합체이다(Latour 2005). 코로나19의 확산 과정을 보면, 바이러스의 변종과 인간의 개입이라는 두 가지 변수의 상호작용이 발견된다. 실제로 우한 봉쇄 이후 우한에서 발견되는 신규 코로나19 사례 중 68%가 무증상 감염으로 나왔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우한 봉쇄로 인하여 잠복 기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약한 증세를 보이는 특정 바이러스가 살아남은 사례로 거론된다. 봉쇄라는 인간의 개입이 코로나19의 유전자 풀 변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조동준 2020).

마찬가지로 사람들마다 전염병에 걸리고 사망할 위험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염병의 진화과정에서 인간의 유전자 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조동준 2020).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적 연구들에 의하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마다 상이한 항원 결정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마다 상이한 항원항체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인류와 오래 동거한다면, 코로나19에 대하여 취약한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이 인류의 유전자 풀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풀이 바뀌는 단기 과정이나 사람의 유전자 풀이 바뀌는 장기 과정을 통하여 바이러스와 인간은 공진화(co-evolution)하게 되는 것이다.

2. 초국적 이동과 국경의 통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전의 전염병들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특성은, 바이러스 또는 바이러스와 인간의 공진화 그 자체보다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잉태한 ‘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라는 전염병의 사회적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 사실 20세기 후반 이후 지구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들의 네트워크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달라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코로나19 사태의 특성은 인간 행위자들이 만들어내는 ‘행위자-네트워크’의 외연적 확장과 그 내포의 다양화라는 현상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연결성과 이동성 및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구화의 산물이다.

과거에도 국지적 감염을 넘어서는 전염병의 확산이 있었지만, 지금의 코로나19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화된 세상에서 발생했다. 오늘날의 지구화라는 현상은, 전염병이 지리적으로 고립된 사람집단 내의 감염에서 지구적 차원의 감염으로 바뀌는 ‘양질전화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인간들의 초국적 이동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발병의 숫자라는 점에서 풍토병이 팬데믹으로 빠르게 퍼지는 좋은 조건이다. 전염의 속도 증대도 관건이다. 오늘날 전염병의 전파 속도는 제트 여객기 속도와 같이 간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12월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지구 반대편인 남미 대륙에까지 번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과거 100여 년 전 유행한 스페인 독감의 전파 속도에만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연결성과 이동성이 증대된 만큼 세계는 전염병으로부터 취약해졌다. 특히 인간 행위자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 현상으로서 도시화가 이러한 취약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사회적 조건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도시는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고 전파된 중국 우한은 이러한 대도시의 대표적 사례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란 단지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라는 ‘공간’의 평면적 특성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도시로서의 우한은 산업생산의 기지이자 교통과 교육의 중심지로, 지구화된 도시의 ‘기능’을 갖춘 네트워크의 허브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대도시가 중국을 넘어서 지구화된 자본주의 체제에 연결된 ‘매개 공간’으로서, 코로나19가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배양지의 역할을 한 것이다.

여행과 같은 단기적 이동이외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본 사람들의 이동과 유입 및 밀집 현상도 코로나19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 감염의 취약한 고리를 형성하는 것은 이주와 난민 문제이다. 각국 차원에서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 단기적 이동에 대한 국경의 통제가 단행되는 상황에서 이주와 난민의 유입과 같은 장기적 이동은 더욱 어렵게 된다. 이미 유입된 이주자들과 난민도 논란거리다. 이주노동자는 일국 차원의 의료와 방역 혜택에서 소외되고 이주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도 사회안보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난민은 더 큰 문제이다. 비좁은 난민촌에 뺨뺨이 모여 사는 열악한 체류 환경으로 바이러스 전염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면역력 부족 등으로 전염병에 취약한데다가 의료보장과 정보접근이 어렵고, 국경의 통제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도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코로나를 계기로 한 사람들의 단기적·장기적 초국적 이동에 대한 국경의 통제는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변수이다. 감염병 위험이 확인됨에 따라,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각국이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고, 의류품의 이동을 통제하는 현상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각 국가들이 취한 입국 제한조치이다. 지구화 과정에서 비자면제 등을 통해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해오던 추세가 역전된 것이다. 그런데 유례없이 지구화된 세상에 이미 편입된 이상 입국금지나 국경봉쇄의 조치를 마냥 내리고 있을 수는 없고 언젠가는 풀어야 하다. 방역 및 국경관리에 있어 공통의 기준보다는 각자의 방침을 적용했던 상황에서, 봉쇄와 개방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접근의 차이는 전염병 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3. 정보의 통제와 인포데믹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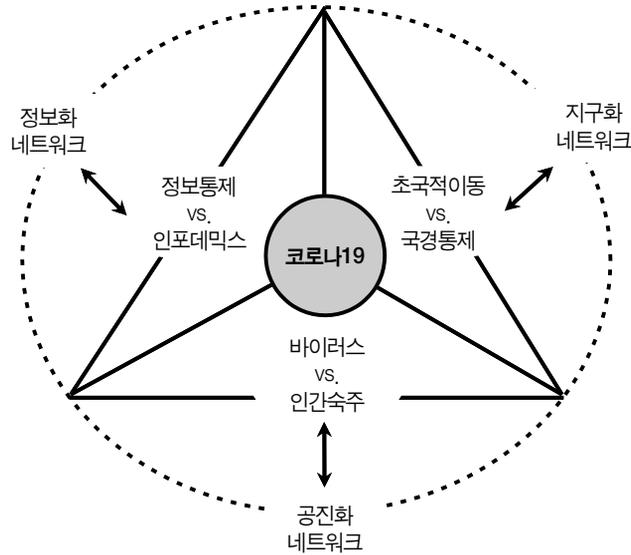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창발하는 양질전화 과정의 저변에는 정보의 통제와 유포라는 변수가 중요하게 작동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해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전염병 관련 정보를 담는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등의 디지털 미디어가 사회구성적 역할을 담당했다. 바이러스라는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 행위자가 구성하는 행위자-네트워크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탈인간(Post-human) 행위자’가 가세하는 모양새였다. 이러한 바이러스-인간-정보 복합체는 긍정적인 역할과 함께 부정적인 기능도 동시에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바이러스 전염만큼이나 정보 전염이 위험하다는 뜻에서 인포데믹스(infodemics)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차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다루는 중국 당국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문제가 되었다. 발생 초기 중국 의사 리원량의 문제제기가 묵살·은닉되고 정보가 지체·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중국 당국이 발병 시거나 진원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바람에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그 확산을 키웠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중국 당국이 보여준 정보의 통제가 중국 체제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맞닿아 있다는 인식이 연동되면서, 코로나19가 중국 국경을 넘어서 전세계로 전파된 데 대한 ‘중국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중국 당국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한 틈을 비집고,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소셜 미디어의 민간정보에 많은 관심이 높아졌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여과되지 않은 미확인 정보와 가짜뉴스, 그리고 신뢰성을 결여한 비과학적 지식과 다양한 민간처방 등이 유포됐다는 것이 문제였다. 잘못된 정보의 수용이 감염병에 대한 잘못된 대응을 유발한 것은 더 큰 문제였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초 숙주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마스크의 재료가 휴지와 동일하다는 소문으로 발생한 휴지 사재기 현상이나 살균제와 소독제가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논란, 특정 국가나 인종이 감염병의 전파자일 수 있다는 잘못된 편견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근거 없는 정보들이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퍼져 나갔다.

이러한 인포데믹스는 과장된 공포, 즉 ‘포비아(phobia)’를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사실 코로나19는 유행 초기부터 치명률이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대중의 불안과 공포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바이러스 감염 자체에 대한 것이기도 했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 생활의 단절과 삶의 파탄과 관련된 것이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의 삶에 대한 통제권의 상실에서 비롯되는 불안과 공포였다(김창엽 2020). 이러한 틈을 타고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괴담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으며, 아직 수면 아래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위험이 ‘과잉 안보화’(hyper-securitization) 되기도 했다.

| 그림 2 | 바이러스-인간-정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러한 정보의 통제와 유포의 메커니즘은 의도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반포하는 심리전의 양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중 간에 최초 감염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가 벌어졌다. 회생양 정치의 차원에서 ‘차이나 바이러스’나 ‘미군의 코로나 유포설’ 등을 주고 받았다. 이러한 심리전 공방에 양국 네티즌들도 가세하여, 구미의 소셜 미디어에는 중국인들이 박쥐를 먹는다는 내용을 담은 혐중(嫌中) 영상이 올라왔을 뿐 아니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다가 바이러스를 유포시켰다는 주장까지 퍼졌다. 마찬가지로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말이 넘쳐났다.

요컨대, 코로나19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과정, 즉 감염원인 바이러스와 숙주인 인간의 공진화, 지구화 시대 인간의 초국적 이동과 국가의 개입에 의한 국경의 통제, 그리고 정보의 반포에 대한 통제와 인포데믹스의 유포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행위자-네트워크의 복잡체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2> 참조). 이러한 복잡 네트워크 구성과 작동 과정에서 확산과 통제의 두 가지 논리가 상호 견제하는 관계를 형성했다. 바이러스의 전염성과 지구화의 개방성 및 정보의 공유성이라는 논리가 한쪽에서 작동한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의 적응성(fit)과 국경의 통제성 및 정보의 폐쇄성이라는 논리가 작동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피드백 관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비인간 행위자는 양질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 및 탈인간 행위자와의 네트워크 복잡체로 창발했던 것이다.

IV. 코로나19와 신형안보 위협의 이슈연계

1. 코로나19와 보건안보, 식량·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코로나19가 지니는 높은 전염력 때문에 인류는 큰 피해를 입었다. 2020년 6월 30일 현재까지 드러난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 상황을 보면, 확진자가 10,185,374명이고 사망자가 503,862명에 이른다(WHO 2020b). 사망자 수로만 보아도 코로나19는 2000년대 이후 발생한 감염병 가운데 사스 770명, 메르스 850명, 에볼라 1만 1천 300명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준 전염병이다. 사망자 숫자가 이 정도에 이르게 되자, 각국은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조차도 의료관리, 공중보건 및 사회안전망,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준, 의료보험 등에 있어서 기존의 시스템이 지닌 한계가 일시에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전염병의 발병이지만 천재(天災)를 인재(人災)로 키운 참사의 성격이 있다는 평가다. 미국·유럽·중국 모두 정치적 명분에 매몰돼 사태의 심각성을 경시하다가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 가도에 미칠 영향만 저울질하느라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을 흘려들었다. 유럽은 브렉시트 와중에 남은 국가끼리의 결속을 과시한다는 명분으로 검역 조치에 실패했다.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수장 역할을 해야 하는 WHO는 코로나19가 팬데믹이 아니라고 버티다가 비판의 화살을 맞았다. 특정 국가에 편향된 상황 해석,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정보 제공 등도 WHO를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거리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은 보건안보 이슈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여타 신형안보 이슈들과 연계되며 그 파괴력을 높인다. 사실 코로나19의 위협은 그 피해가 양적으로 크다는 점에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여타 이슈영역과 연계되면서 그 위협이 증폭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자체의 직접적인 충격과 영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가 그 위협 증폭의 메커니즘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워나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영향이 미친 이슈영역들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는 데, 일차적으로 전염병의 보건안보에서 식량·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안보이슈로 연계되는 연쇄의 고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의 통제는 식량의 가용성과 이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연쇄적인 수출 제한을 유발하고 국제 식량수급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제사회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글로벌 식량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품 사재기’나 ‘식량보호주의’적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둔 곡물 수출 제한 조치, 이동 제한과 확진자의 증가 탓에 세계 곳곳에서 빚어지는 농산업 부문의 노동인력 공급차질 등을 방치한다면 차츰 코로나19 발(發) 식량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김규호, 2020).

코로나19 사태는 에너지 산업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석유산업이 가장 타격을 입어서 2020년

4월 20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37.63달러에 거래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팬데믹이 종식되고 유가가 회복된다 해도, 고유가 시대는 다시 도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합의를 철회했고, 이에 사우디는 보복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면서 하락 모멘텀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석유갈등은 코로나 사태 이후 에너지 시장의 재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존재하던 탈(脫)석유화의 구조적 변동 압력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위축과 지구적 석유소비 감소에 의해 그 효과가 증폭되면서 석유 패러다임의 종식마저 거론되고 있다.

전염병과 기후변화의 이슈연계도 예사롭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시설 가동이 멈추고 교통·항공편이 취소되면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줄었고, 미국 뉴욕 주에서는 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팬데믹이 지나가고 이동 제한이 풀려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는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오히려 더 심하게 반등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손실을 본 경제부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심창원 2020).

2. 코로나19와 경기침체, 금융·무역 교란, 사회안보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충격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체감되는 것은 경기침체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숫자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아시아보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대국들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대국의 2020년 GDP가 모두 0% 이하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경기침체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 시작되어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듯이 경기침체도 이를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경기침체는 부채증가와 대규모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침체에 이은 재고증가와 대량실업 등이 물가하락과 투자부진을 낳고, 이것이 다시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을 확대하려 시도하는데, 많은 국가의 공공 부채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재정적자의 확대를 유발할 것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플레이션과 금리상승을 막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한 통화정책을 쓸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보호주의 때문에 공급은 줄어드는 가운데 시중 자금이 너무 많이 풀린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 즉 불황 속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물경제가 계속 침체할 경우, 글로벌 금융질서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경기가 위기 전

수준으로 빨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저금리와 막대한 재정적자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다. 한편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국가에서는 주가가 폭락하여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도 해외투자가 급감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발적 성장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대규모 위기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다.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금융 불안정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에 따른 국제무역의 감소라는 추세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통해서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탈동조화(decoupling)의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생필품, 의약품, 구호장비 등의 생산은 철저히 국내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정서에 편승해서 다른 산업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망 재설계의 기본 방향은 위험완화 전략이 될 것이다. 공급망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초국적 기술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것이다. 그 대신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또는 인접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을 형성하려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진국 기업들은 해외의 생산기지를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들은 자국 고용을 늘리는 선택보다는 자동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코로나19가 그 출현을 앞당긴 비대면(untact) 환경에서 사람이 있던 자리에 감염 우려가 적음, 이른바 ‘방역 맞춤형’ 기술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치 아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했던 기업들의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보면,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노동자들의 사라진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반기웅 2020).

이러한 경제와 노동의 변환과 재편의 이슈는 ‘팬데믹 디바이드’(pandemic divide)로 불리는 사회안보의 위협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보건안보와 의료 접근성에서 유발된 사회적 취약성의 표면화로 기존에 잠재되어 있던 구조적 불평등이 표출되고, 특정 인종·종교에 대한 혐오의 증가로 사회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면 환경의 확장 속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격차가 사회·금융·교육·건강 등의 불평등 확대로 이어지고, 사이버 공간의 인포데믹스가 사회적 유대에 흠집을 내면서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는 여타 분야에서 상존하는 계층 간 불평등과 구조적 실업 및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 등과 같은 맞물리면서 심각한 사회안보의 위협이 제기될 수도 있다.

3. 코로나19와 비대면 사회,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안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환경이 급속히 조성되었다. 재택근무 도입으로 온라인 쇼핑, 택배주문, 온라인 banking 등 비대면 경제도 급부상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과 같은 온라인 기업, 특히 줌(Zoom)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 기업이 뿔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온라인 기반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비대면 경제를 넘어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비대면 사회의 도래도 예견되는데, 원격의료, 원격강의, 화상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비대면 의정활동과 선거운동,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국제 외교활동 증대 등이 도입되고 있다(반기웅 2020).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그 이전 가장 빠른 성장가도를 달렸던 공유경제는 크게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예를 들어,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공유부동산을 표방한 위워크 등과 같이 공유경제를 세계적으로 선도해왔던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휘청거리며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우버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전체 직원의 14%에 달하는 3,700명을 해고했고, 에어비앤비 또한 전체 인력의 25%에 해당하는 약 1,900개 일자리를 줄이는 등 매출급감에 따른 구조조정이 단행하고 있다. 기존 공유경제는 상당부분 타격을 받고 전략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조준영 2020).

반면 데이터 활용과 정보 공유는 증대됐다.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장비나 약품의 생산·분배를 돕고, 의료인력의 활용에도 도움을 주었으며, 실시간으로 인구이동 추적과 코로나19 확진자의 예측과 검출 및 바이러스 치료제의 신속한 발견에 활용되었다. 그런데 비대면 환경을 배경으로 한 데이터 활용과 정보 공유는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 및 인권침해의 문제를 제기했다. 확진자 동선 및 자가 격리자 신상의 공개, 진료기록과 같은 바이오 정보의 공개 문제 등이 민감한 쟁점으로 제기되었다(이진규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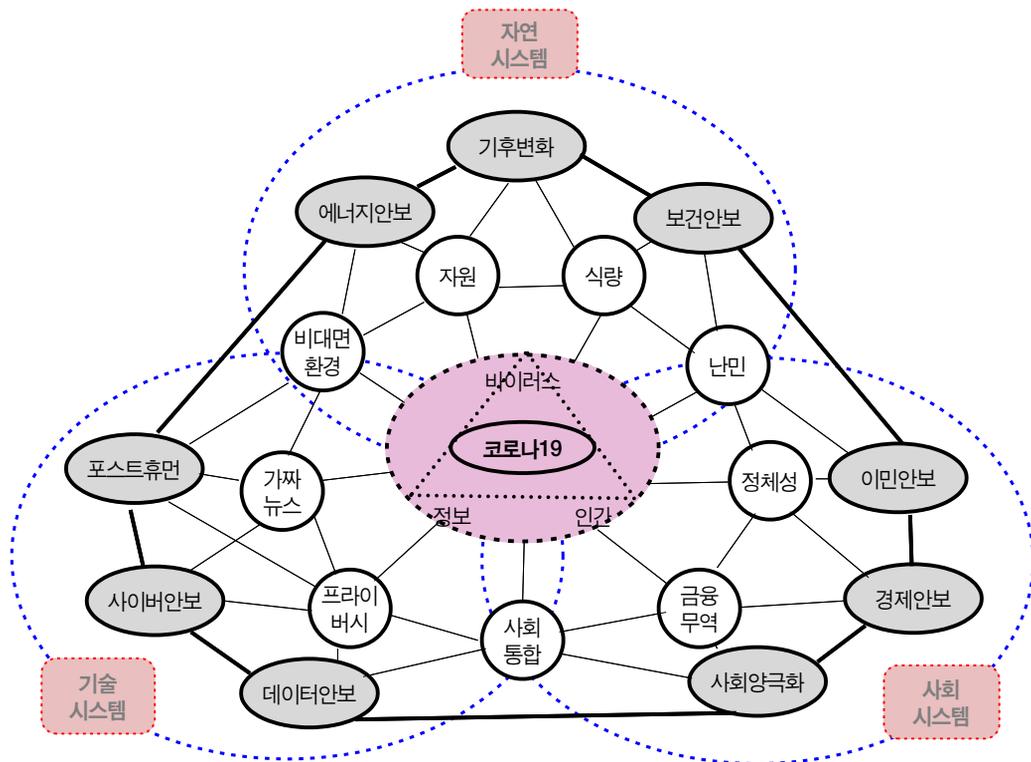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는 프라이버시와 시민적 자유가 보건안보의 공공성을 빌미로 해서 얼마나 희생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유발했다. 특히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위치정보, 실시간 추적, 안면인식 기술 등과 같은 대량감시 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활용할 것인지가 논란거리였다. 이는 국가의 감시역량 강화와 이에 저항하는 개인의 권리수호 문제로 인식되었다. 국제적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중보건 우위 시각과 서구 국가들의 프라이버시 중시 시각이 지닌 차이가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더 나아가 전체주의적 감시와 시민사회 역량의 교차로에 놓인 인류의 선택에 대한 논쟁마저 유발되었다(Harari 2020).

한편,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성된 비대면 환경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도 문제가 되었다. 개인적 삶과 사회적 활동의 많은 영역들이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이를 겨냥한 범죄와 테러, 스파이 활동도 사이버 공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혼란을 악용하는 사이버 공격들이 등장하고 있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줌과 같은 원격회의 소프트웨어는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기업 및 국가 기밀을 노출시켰고,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한 스미싱과 가짜뉴스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타국 백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백신개발 정보를 빼내려는 사이버 첩보 활동도 본격

화되고 있다(임종인 2020).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간 자리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급습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요컨대, 코로나19의 창발로 인한 안보위협은,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안보에서 시작해서 식량·에너지, 기후변화 등과 같은 자연시스템에서 비롯되는 신홍안보 이슈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위기는 경기침체와 금융질서의 교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거쳐서 이민·난민, 인권, 경제·사회적 불평등, 종교·문화 갈등 등과 같이 사회시스템에서 비롯되는 안보위협으로 증폭되며, 새로운 부상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무인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안보, 사이버안보 등과 같이 기술시스템에서 비롯되는 신홍안보 이슈로 연계된다. 이렇게 이슈연계의 매커니즘을 따라서 창발하는 코로나19의 위협은 그 자체로도 세계정치에 막대한 충격을 주겠지만, 지정학의 입계점을 넘어서 전통안보의 이슈와 연계되는 경우 그야말로 본격적인 국제정치학의 이슈로 부상하게 된다.

| 그림 3 | 코로나19와 신홍안보 위협의 이슈연계



출처: 김상배(2015, 26)에서 응용

V. 코로나19와 미중 패권경쟁의 (복합)지정학

1.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권력구조의 변동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시작되어 세계정치의 여러 이슈영역과 연계되며 확장되며 더니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이고 있는 미중경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수년간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미중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 상대적 국력격차 벌이기 경쟁으로 진행되는 미중경쟁의 결과는 패권국과 도전국 간의 세력전이를 통해서 글로벌 권력구조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기반을 둔 고전지정학의 관심사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양상을 더욱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국관계를 정치군사적 차원의 파국에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

현재 미국으로 무게추가 기울어 미중 간의 군사적 비대칭이 당분간은 역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까운 미래에 양국 간의 군사적 대립과 충돌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그 동안 지속되어 온 군사안보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남중국해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였고, 내년 국방비의 6.6%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도 핵추진 항공모함에서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국에 대한 항행 자유의 작전 등 군사적 대응을 지속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중 군사안보 경쟁의 추세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전재성 2020, p.10).

그보다는 오히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미 양국 간의 상대적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던 경제 분야의 갈등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2020년 1월 20일의 1단계 미중 무역분쟁 협상안 타결 이후 다소 소강기에 들어섰던 양국 간 경쟁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콩, 기계, 에너지 제품을 포함한 2천억 달러의 미국 제품을 추가로 구매할 것을 약속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를 이행하기가 어려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러한 중국의 약속 불이행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추가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경제 분야는 이미 양국 간의 ‘상호의존’은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파국 상황을 예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교착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미중 양국은 미래국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패권을 놓고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미중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5G 분야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당장 쟁점이 되고 있는 미중 기술경쟁의 면모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술혁신의 국내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담론이 득세하면서 제조업 기반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와 연계되어 해외 생산시설을 리쇼어링하는 기술민족주의적 행보로 이어진다. 글로벌 공급망을 공유하던 시대는 사라지고, 미중이 서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기술민족주의와 공급망 재편 문제는 반도체 산업에서 제일 먼저 불거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탈출하고 있는 중국은 2025년까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자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기술의 아시아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화답하여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약12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다(김혜원 2020). 이러한 사건 전개는 대만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와도 접맥되는데, 이미 미국 정부는 대만의 F-35 반도체 부품업체의 미국 내 생산을 허가한 바 있다.

코로나19 국면의 미중 기술경쟁은 인공지능(AI)에서도 나타났다. 양국은 감염병 유입차단, 경로분석, 현장대응, 확산방지 등의 전주기 과정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면서 관련 기술의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실리콘밸리의 AI기업들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백신 개발에 테크기업의 핵심기술·자원 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바이두, 알리바바, 기타 로봇·물류 기업들이 감염병 차단 및 방역 활동에 AI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드론·안면인식 등의 디지털 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가적 감시체계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AI기술의 개발과 적용상의 차이는 향후 양국의 기술보호주의로 전화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AI, 사이버, 데이터, 우주, 그리고 바이오 등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수출입통제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 장차 무역 분야의 제도마찰로도 발전할 소지가 있다(김지혜·안명옥 2020).

한편 비대면 패러다임의 부상은 미중 간에 초국적으로 구축되는 인터넷 플랫폼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온라인 화상회의, 전자상거래, 핀테크, OTT 서비스 등을 위한 비대면 시스템의 구축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5G 분야의 경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G를 선도하는 중국 기업 화웨이 주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도 유럽 국가들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선택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의 대두로 화웨이 5G 장비에 대한 불신도 늘어나서 유럽에서 5G 도입이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틈을 타고서 미국은 2020년 3월 ‘5G 보안 국가전략’을 발표하여 5G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코로나19 여파로 5G 투자에 주춤하는 사이, 먼저 안정세를 찾은 중국은 2020년 50만 개의 5G 기지국 건설한다는 목표 하에 자국 내 5G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오일석 2020).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스템의 구축을 바탕으로 한 초국적 인터넷 플랫폼의 부상과 이를 장악하려는 경쟁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의 기술안보의 경향은 ‘사이버 주권론’과 같은 기존의 사이버 공간의 ‘정치사회적 장벽 세우기’를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기술공학적 장벽 세우기’를 야기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논의될 뿐만 아니라 법제화되고 있는 ‘독립 인터넷’(Independent Internet)과 ‘인터넷안전법’ 등이 그 사례이다. 이러한 시도에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체계로부터 독립된, 루트서버나 새로운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이름체계 등을 국가 단위로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화웨이 사태 이후 중국은 기존의 인터넷과는 다른 기술시스템의 구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도 일본, 호주,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과 ‘사이버 기술 동맹’을 추구할 구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코로나 19 이후의 미중 기술경쟁은 코로나19 관련 과학연구와 기술개발 경쟁의 점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미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그 밖의 바이오·제약·의료 기술을 둘러싼 양국 간 경쟁은 시작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코로나 감염증에서의 최종 승리는 과학기술뿐이라며 바이오제약, 의료기술 등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독려했다.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민간 제약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밝힌 가운데,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은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보면 코로나19 사태의 발생은 바이오기술(BT) 패러다임 또는 ‘5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향한 양국의 경쟁을 앞당기는 효과를 낼 것이다. 질병에 의한 죽음의 공포를 절박한 위협으로 각인시킨 코로나19의 발생은 여태까지 인류가 추구해온 기술발달의 경로를 좀 더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2. 미중 체제경쟁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백

21세기 국력경쟁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보면, 코로나19 사태는 미중 양국의 체제경쟁을 부각시켰다. 미중 체제경쟁은 이전에도 무역 분야에서 제기된 바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는 그 성격을 변화시켰다. 자국 정치경제 체제의 특수성과 우월성을 과시하는 경쟁에서 갑작스런 위기에 대응하는 적합력(fitness)과 복원력(resilience)의 경쟁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봉쇄 모델뿐만 아니라 예방과 치료 및 회복의 전 과정에 걸친 메타 거버넌스(meta-governance)의 역량이 위기해결 모델의 관건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리더십의 판단과 결단력,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등도 쟁점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모두가 이러한 차이점을 상대국에 대한 체제우월성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로 활용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미중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중국이 정부 주도로 위로부터의 통제를 강조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미국은 사태가 심각해지기 이전까지는 국가보다는 민간 주도 대응방식에 의존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차이가 낳은 결과는 일견 중국의 통제 모델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뒤늦게나마 지역봉쇄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는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코로나19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중국 모델은 자국 중심의 대처방식이나 권위주의적 사태 축소,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결여, WHO에 대한 미온적 국제협력 태도, 재난 민족주의적 정서의 동원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체제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은 더 큰 타격을 입어서 코로나19 사태는 미국 체제 모델에 대한 실망과 비판을 야기했다. 기존에는 글로벌 패권국으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다양한 동경이 존

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장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며 체면을 구겼다. 미국은 의학 수준과 신약 개발 등의 의료분야에서 세계 최고 국가이지만 마스크와 호흡기, 인구비례 병상 수, 진단시약 등 기초 의료설비 및 서비스 등에서 큰 허점을 드러냈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상황 대처 및 미국인들의 보건 의식, 경기침체와 실업률 폭등, 인종차별과 사회불평등 및 사회혼란 문제 등을 목도하면서 미국 체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미중 양국의 리더십도 도마 위에 올랐다. 1956년 수에즈 운하 사건으로 영국의 리더십이 일거에 사라졌던 것처럼, 미국의 리더십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빠른 속도로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Campbell and Doshi 2020). 국내 거버넌스, 글로벌 공공재의 제공, 위기협력의 결집·조정 역량 등에 기초한 미국 리더십의 정당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도 2021년 대외원조 예산을 21% 삭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중에는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 지원금의 35% 삭감이 포함되었으며, WHO 지원금도 50% 삭감되었다. 또한 2020년 3월에 개최된 G7과 G20 화상회의에서 ‘우한 바이러스’ 표현의 삽입에 대한 미국의 무리한 주장 때문에 공동선언합의가 실패하기도 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4년 에볼라 위기 당시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과 대조적 상황이었다.

중국도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음은 마찬가지였다. 사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감염병 확산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했다면,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이 지구화 시대의 무대를 주도할 새로운 주역임을 보여줄 수 있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WHO에 대한 중국의 비공식적 압력, 방역과정에서의 비민주적 인권유린, 시진핑 리더십에 대한 찬양, 통계자료에 대한 통제 등에서 중국이 보여준 모습은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중국이 글로벌 리더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게 했다. 미국과 유럽의 약화와 후퇴는 명확한 사실이었지만, 이것이 곧 중국의 약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비춰졌다(Green and Medeiros 2020).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과 중국 모두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른바 ‘G0’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은 스스로 글로벌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습이고, 중국은 아직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국제사회는 글로벌 차원의 위기를 겪은 뒤 유사한 위기의 재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방지를 위해 다자주의적 대안을 모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9.11 테러 이후에는 전 세계가 알카에다의 테러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Gvosdev 2020).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G20 정상회의가 창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의 리더십은 실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유럽 모두 코로나 이후 다자 간 국제협력에 나설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는 유엔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유엔은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발생 직후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사태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임을 선언하고 긴급대응에 나서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응하는 다자협력의 좋은 선례를 남긴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유엔 안보리는 코로나 관련 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이 안보리 결의의 전제조건으로 ‘우한 바이러스’ 명시를 고집하고, 중국이 코로나19 이슈를 안보 이슈로 확대하는 데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 주된 이유였다(성기영 2020).

사실 최근 수년간 세계정치의 무대에서 국제레짐은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러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폐기, 미국의 마-이란 핵합의(JCPOA) 탈퇴,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NPT체제의 약화, 자유무역 국제레짐의 약화 등이 주요 사례이다(이상현 2020).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도 글로벌 보건문제를 관장하는 WHO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는 비판에 직면했으며, WHO에 대한 미국의 지원중단까지 거론되었다. 기존의 국제레짐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새로운 국제레짐의 창설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국제협력의 어젠다를 주도할만한 국가의 부재 현상과 맞물리면서,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들어서더라도 위기 재발 방지와 2차 전파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에 기반을 두는 비지정학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일종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2008년 위기 이후 G20가 일종의 ‘제도적 혁신’을 이루어냈다면, 지금도 그러한 제도적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G0’를 넘어서는 이른바 ‘포스트-G20’ 또는 ‘G-n’ 모델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한 미중의 리더십은 실종되고 새로운 제도적 혁신의 길은 요원하다. 강대국 주도의 모델이나 국가 행위자 주도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발상의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가 없이도 그 부담과 책임을 공유할 복수의 국가들의 협업모델일 수도 있다. 아니면 민간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참여하는 그야말로 초국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일 수도 있다.

3. 미중 담론경쟁과 글로벌 정치질서의 변환

코로나19의 발생과 전파 과정에서 진행된 미중경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양국이 상호비방전의 형태로 진행한 담론경쟁 또는 ‘이야기 전쟁’(a war of narratives)이다. 소셜 미디어에서 제기된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들이 미중 양국의 지도자들 입으로 비화되어 책임 전가성 발언과 조치들로 이어졌다. 사실 발원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것은 확산 관련 정보의 파악을 위한 것이지 특정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미중 간에 벌어진 발원지 논쟁은, 감염병이라는 신홍안보 위협을 공동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국가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속내를 드러냈다(Huang 2020; Schell 2020).

코로나19 발생 초기 미국 정부와 의회, 언론은 중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입을 통해 ‘중국 바이러스’나 ‘우한 바이러스’라고 명명되며 중국이 발원지임을 명확히 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내세우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국 언론은

코로나19가 우한의 바이러스연구소의 생화학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를 했다. 중국은 여러 가지 의혹을 완강히 거부하며 역공세에 나섰다, 우한봉쇄가 생명을 우선시하는 중국 방역전략의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중국에서는 2019년 10월 우한에서 열린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미군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소문이 퍼졌고, 중국 호흡기질병 권위자 중난산이 우한이 발원지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호비방전이 전개된 데는 미중 정상이 처한 양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보이지 않는 적’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시진핑 주석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돌아서자 시진핑 주석이 방역 업무에 성공한 ‘인민의 영웅’으로 치켜세워지기도 했다. 한편 미중은 ‘코로나 책임담론’을 넘어서 ‘코로나 회복담론’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기 동맹진영의 결속을 모색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동맹외교의 추진에 있어서 의도했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특히 코로나19의 미국 내 확산방지를 이유로 30일간 유럽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유럽 지도자들을 실망시켰다. 유럽의 동맹국들과 사전 상의나 통보도 없었던 전격적인 조치였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러한 동맹 파트너십의 손상은 미국의 가장 큰 손실로 기록될 것이다. 중국도 ‘의료 실크로드’ 구축을 내세워 이른바 ‘마스크 외교’(mask diplomacy)를 펼쳤지만, 이런 중국의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도 곱지는 않았다.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정보를 중국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상황에서, 뒤늦게 코로나19 대응책을 전파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부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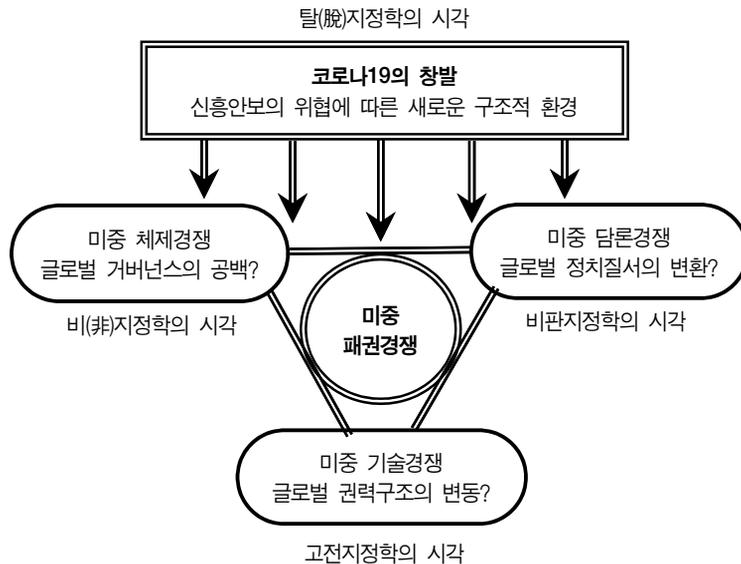
미국과 중국의 신뢰성에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진 만큼,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이 미중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다자·지역협력의 이니셔티브도 그 추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라는 ‘중국 책임론’을 코로나19 해결사라는 ‘중국 공헌론’으로 바꾸기에는 갈 길이 멀다. 글로벌 리더십의 장주기 이론에서 말하는 ‘탈정당화’(delegitimization)를 넘어서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의 국면에 접어든 미국의 지도력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어느 국가도 자국의 안전이나 이익을 보장할 만한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공연히 무리한 ‘줄서기’를 하는 것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국제적 거리두기’(international distancing)가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차두현 2020).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세계적 개방성의 후퇴와 폐쇄적 고립주의의 대두를 목격하고 있다. ‘열린 국경’의 원칙을 내세우며 여권 심사 없이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했던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국경을 봉쇄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미국 우선주의’, 브렉시트 등과 같은 보수주의적인 포퓰리즘의 확산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와해와 다자주의의 퇴조가 점쳐지기도 한다(Farrell and Newman 2020). 현실주의 고전지정학의 시각에서 말하는 바처럼, “코로나 팬데믹은 개별국가 단위의 권력을 강화하고 민족주의의 재발흥”을 부추기고 있다(Walt 2020).

그렇지만 개방의 문제는 개방의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비지정학의 전망도 없지 않다. 바이러스의 확산이 사라지면 다시 국가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협력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신홍안보의 성격을 고려할 때, 팬데믹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또는 초국적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중경쟁의 결과로 인해서 향후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정치질서의 미래는 어떠할까?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민족주의적 고립주의의 경합 속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정치질서의 성격은 무엇일까?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기반을 둔 비판지정학의 시각에 볼 때,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정치질서의 기반이 되는 국가·국민 정체성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어떻게 새로이 구성될까?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정치질서가 다자주의의 약화와 국가주권의 강화로 드러나는 가운데 지역 차원에서 요청될 국제협력과 정치질서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미래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연구해야 할 주제들인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안보의 국제정치학 연구라는 차원에서도 탐구해야 할 주제들임은 물론이다(조한승 2019).

| 그림 4 | 코로나19와 미중경쟁의 (복합)지정학



요컨대, 코로나19 팬데믹의 (복합)지정학적 효과는 글로벌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 패권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그 경쟁의 양상을 기술경쟁과 체제경쟁, 담론경쟁 등으로 더욱 복잡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4> 참조).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중경쟁의 복합성이 더해지는 동시에 그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19 이전의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논의는 미중 간 상대적 국력 격차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경향이 있었지만,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점차로 적합력과 복원력 발휘를 쟁점으로 하는 미중 간 위기해결 모델 경쟁, 그리고 미중의 글로벌 리더십 경쟁으로 급속히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중경쟁의 결과로 세계정치는 글로벌 권력질서의 구조변동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제도적 혁신, 그리고 글로벌 정치질서의 기반이 되는 국가·국민 정체성의 재구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변환을 동시에 겪게 될 것이다.

VI. 맺음말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지대한 만큼 그 영향에 대한 각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신홍안보의 복합지정학을 원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의 창발과 여기서 파생되는 세계정치의 변환을 살펴보았다. 이 글이 원용한 신홍안보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논의되는, 전통안보와 구별되는 ‘비(非)전통 안보’나 단순히 새로운 안보라는 의미의 ‘신(新)안보’와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 복잡계 이론에 기원을 두는 신홍안보의 개념은 그 위협생성의 과정과 내용 안에 미시적인 생활 속의 안전(또는 보안) 문제와 거시적인 국가 차원의 전통안보 문제를 모두 품으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글은 복합지정학의 시각을 원용하여 양질전화와 이 슈연계의 과정을 거쳐서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어서 창발하는 코로나19의 세계정치를 보는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 사태는 미시적 단계에서 거시적 단계로 창발하는 신홍안보의 위험이 단순히 이론적 상상 속의 허구가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위협하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케 하였다. 코로나19의 위험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다시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코로나19의 피해가 확진자나 사망자의 숫자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에 따라 신홍안보의 질적 충격을 보는 시각은 달라질 것이다. 시간적으로도 향후 이 전염병의 지구적 만연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냐에 따라 그 충격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발생은 주기적 현상일 수도 있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에 이어 3-4년을 주기로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발해 가는 복합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복합 네트워크가 창발하는 과정에는 비인간 행위자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자체뿐만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인 바이러스와 공진화하는 인간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양질전화의 과정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을 감싸 안는 탈인간 행위자, 즉 정보 네트워크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러한 창발 과정에는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는 행위자-네트워크들이 작동하는데, 감염원인 바이러스와 숙주인 인간의 공진화, 지구화 시대 인간의 초국적 이동과 국가의 개입에 의한 국경의 통제, 그리고 정보의 반포에 대한 통제와 인포테크믹스의 유포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복합체를 구성해 간다. 이

글은 이러한 복합체의 구성과 작동 과정에 투영된 확산과 통제 of 상호관계 메커니즘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정치의 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건안보 분야에서 시작된 전염병 이슈가 어떠한 메커니즘을 타고서 여타 신홍안보 이슈와 연계되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급영향을, 그것도 예상할 수 없는 정도와 방식으로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어서 그 영향의 범위가 어디에서 그칠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창발로 인한 안보위협은, 보건안보에서 시작해서 식량·에너지, 기후변화, 경기침체와 금융질서의 교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민·난민, 인권, 경제·사회적 불평등, 종교·문화 갈등, 기술안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안보, 사이버 안보 등의 여러 이슈와 연계되면서 그 위협을 증폭시켜 나갔다.

이러한 양질전화와 이슈연계를 따라서 창발하는 코로나19는 전통안보에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래 세계정치에 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세계정치의 변환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 초점을 두어서 다른 미중 패권경쟁의 가속화와 그로 인한 세계정치의 변환은 이러한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국내외 학계의 시각은 아직까지 단순 국제정치학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에서 발생한 위기가 현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전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묻는 정도이다. 이들 시각은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블랙박스’에 넣어놓고, 그것이 세계정치의 권력구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논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탈근대적이고 탈인간적 위협에 대한 근대적이고 인간중심적 처방을 찾는 모습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코로나19 사태는 개인 각자의 건강관리 문제를 넘어서 국민건강과 국가안보를 논하게 하는 큰 위협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곤욕을 치렀던 한국에게 코로나19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 또 다른 위기였다. 초기 대응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고 특정집단의 발병으로 한때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보건의료인의 헌신적 노력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위기를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한국 정부의 신속검진 정책과 질병정보의 개방성, 투명성, 대중접근성 원칙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질병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 받게 되어, 이른바 ‘K-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향후 사태의 진전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러한 한국 모델이 세계인의 관심을 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교 분야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는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할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미중과 같은 강대국이 나서서 위기를 해결했던 과거의 모델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중견국들의 리더십 연대 모델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미국 리더십의 약화는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났으며 예전과 같은 패권국의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가까지 한다. 그럼에도 아직은 중국이 그 빈자리를 메우면서 약진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리라는 신뢰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듯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을 우려케 하는 상황에서 강대국 주도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넘어서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의 역할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규호. 2020. “코로나19 발(發) 식량위기의 부상 배경과 대응 과제.” 『이슈와 논점』 1703호, 4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
- 김상배. 2015. “신홍안보의 부상과 과학기술의 역할.” 『Issue Paper』 2015-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월.
- _____. 2018.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 한울엠플러스.
- _____. 편. 2016. 『신홍안보의 미래전략: 비전통 안보론을 넘어서』. 사회평론.
- _____. 편. 2018. 『4차 산업혁명과 남북관계: 글로벌 정보화에 비춘 새로운 지평』. 사회평론.
- _____. 편. 2020. 『신홍무대의 중견국 외교: 복합지정학의 시각』. 사회평론.
- 김상배 · 신범식. 편. 2017. 『한반도 신홍안보의 세계정치: 복합지정학의 시각』. 사회평론.
- _____. 편. 2019. 『동북아 신홍안보 거버넌스: 복합지정학의 시각』. 사회평론.
- 김지혜 · 안명옥. 2020. “코로나19 전후 미중 AI 기술 패권 경쟁.” 『인공지능, 코로나19를 만나다: 코로나 19로 되짚어보는 AI의 현재와 미래』 AI Trend Watch, 2020-4호, 4월 15일.
- 김창엽. 2020. “新감염병레짐...신자유주의적 코로나19.” 『프레시안』 3월 23일.
- 김혜원. 2020. “코로나가 불붙인 ‘반도체 삼국지’... 패권다툼 2라운드 막 올랐다.” 『아시아경제』 5월 15일.
- 민병원. 2017. “창발적 안보와 복잡성 패러다임: 신홍안보 개념의 비판적 고찰.” 김상배 · 신범식. 편. 『한반도 신홍안보의 세계정치: 복합지정학의 시각』 사회평론, pp.68-98.
- 반기웅. 2020. “밀려오는 ‘언택트’, 밀려나는 노동.” 『경향신문』 (5월 2일).
- 성기영. 2020.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다자주의의 모색.” 『이슈브리프』 통권191호, 4월 2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신상범. 2017. “글로벌 보건과 국제정치학: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국제정치논총』 57(3), 87-132.
- 심창원. 2020 “코로나19로 기후 변화 멈출까? 경제 위기 끝나면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어.” 『The Science Times』 4월 2일.
- 오일석. 2020. “코로나19 확산과 5G 기술 패권경쟁.” 『이슈브리프』 통권182호, 4월 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이상현. 2020. “코로나19 국제정치와 글로벌 거버넌스.” 『세종정책브리프』 No.2020-04, 5월 22일, 세종연구소.
- 이진규. 2020. “코로나 바이러스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고: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은 항상 옳은가?” 『2020 KISA Report』 Vol.2, 한국인터넷진흥원.
- 임종인. 2020. “코로나-19 시대의 사이버 안보.” 『IIRI Online Series』 No.67, 5월 25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전재성. 2020. “코로나 사태와 미중경쟁.”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대회 발표논문, 7월 1일.
- 조동준. 2020. “코로나-19 이후 인류의 삶.” 『이슈브리핑』 No.92, 6월 5일,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 조용우. 2020. “팬데믹과 신종 전염병 그리고 기후변화의 위기.” 『천지일보』. 3월 12일.
- 조준영. 2020.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패권경쟁...주류 문화 넘보는 언택트” 『머니투데이』 (5월 17일).
- 조한승. 2019. “동북아 보건안보 거버넌스.” 김상배 · 신범식. 편. 『동북아 신홍안보 거버넌스: 복합지정학

의 시각』, 207-245. 사회평론.

질병관리본부. 2020. “코로나19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웹사이트. 4월 2일.

<http://ncov.mohw.go.kr/baroView.do?brdId=4&brdGubun=41> (검색일: 2020년 6월 14일).

차두현. 2020. “‘코로나19’를 통해 본 ‘신안보’와 국제질서.” 『이슈브리프』 3월 25일 아산정책연구원.

Campbell, Kurt M. and Rush Doshi. 2020. “The Coronavirus Could Reshape Global Order: China Is Maneuvering for International Leadership as the United States Falter.” *Foreign Affairs* March 18.

Castells, Manuel. 200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Farrell, Henry and Abraham Newman. 2020. “Will the Coronavirus End Globalization as We Know It? The Pandemic Is Exposing Market Vulnerabilities No One Knew Existed.” *Foreign Affairs* March 16.

Green, Michael and Evan S. Medeiros. 2020. “The Pandemic Won’t Make China the World’s Leader Few Countries Are Buying the Model or the Message From Beijing.” *Foreign Affairs* April 15.

Gvosdev, Nikolas K. 2020. “Why the Coronavirus Won’t Transform International Affairs Like 9/11 Did.” *The National Interest* May 5.

Haass, Richard. 2020. “The Pandemic Will Accelerate History Rather Than Reshape It.” *Foreign Affairs* April 7.

Hansen, Lene and Helen Nissenbaum. 2009. “Digital Disaster, Cyber Security, and the Copenhagen School.”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3(4): 1155-1175.

Harari, Yuval N. 2020.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inancial Times* March 20.

Huang, Yanzhong. 2020. “U.S.-Chinese Distrust Is Inviting Dangerous Coronavirus Conspiracy Theories And Undermining Efforts to Contain the Epidemic.” *Foreign Affairs* March 05.

Ikenberry, G John. 2014. “The Illusion of Geopolitics: The Enduring Power of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93(3): 80-90.

Latour, Bruno. 2005. *Reassess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ead, Walter Russell. 2014.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93(3): 69-79.

Nye Jr., Joseph S. 2020. “No, the Coronavirus Will Not Change the Global Order.” *Foreign Policy* April 16.

Rudd, Kevin. 2020. “The Coming Post-COVID Anarchy The Pandemic Bodes Ill for Both American and Chinese Power—and for the Global Order.” *Foreign Affairs* May 06.

Schell, Orville. 2020. “The Ugly End of Chimerica: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turned a Conscious Uncoupling into a Messy Breakup.” *Foreign Policy* Spring.

Walt, Stephen M. 2020. “The Realist’s Guide to the Coronavirus Outbreak.” *Foreign Policy* March 9.

Walt, Stephen M. et al. 2020. “After the Coronavirus: The Pandemic has already Disrupted the World. We asked 12 Leading Global Thinkers to Predict What Happens Next.” *Foreign Policy*

Spring.

WHO. 2020a.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Situation Reports-60,” March, 20.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situation-reports/20200320-sitrep-60-covid-19.pdf?sfvrsn=d2bb4f1f_2 (accessed June 18, 2020).

WHO. 2020b.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Situation Reports-162,” June, 30.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coronaviruse/20200630-covid-19-sitrep-162.pdf?sfvrsn=e00a5466_2 (accessed July 1, 2020).

COVID-19 and the Complex Geopolitics of Emerging Security :

The Emergence of Pandemic and the Transformation of World Politics

Sangbae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COVID-19 pandemic that hit the first half of 2020 will be recorded as one of the landmark events that caused the transformation of world politics. However, the existing research on the World Politics of COVID-19 has not yet progressed much, and it remains at a level that presents a fragmentary view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Simpl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Relations.” Considering the complex aspects of world politics undergoing transformation due to the emergence of the COVID-19 Pandemic, it is urgent to develop a theoretical framework for looking at the World Politics of COVID-19, even though it is still taking places. From this point of view, COVID-19 is a typical example of “emerging security.” The COVID-19 crisis, which is seen as emerging security, is a risk in the complex system that emerges beyond “the criticality of geopolitics” through the process of “the transformation of quantity into quality” and “issue linkage.” At a micro level, it may be a simple personal health problem, but if it increases quantitatively and exceeds certain thresholds, it becomes a health issue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and furthermore, it becomes a problem enough to discuss national security as it is linked to issues such as economy, society and diplomacy. The recent COVID-19 crisis was emerged through this very mechanism, making it such an critical issue as to mention national survival on a macro level. This paper analyzes the dynamics of “the Complex Geopolitics” of COVID-19 examining the case of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which has been accelerating in the wake of the recent COVID-19 crisis.

Key words: COVID-19, Pandemic, Emerging Security, Complex Geopolitics, World Politics
